

전주시 내년 예산 2조5505억원 규모 편성

올해 당초예산보다 1047억원 증액... 전주시의회에 심의 요청

전주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047억원이 증액된 2조 5505억원 규모로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이 부자 되는 강한 경제 △글로벌 산업으로 우뚝 서는 문화 △100만 미래광역 도시 기반 조성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 등 경제위기 극복과 전주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주의 대변혁을 견인할 미래산업을 고도화하고, 청년 일자리 조성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필요한 2315억원 규모의 경제 분야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수소·탄소·드론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스포츠 복합센터 건립 48억원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45억원 △수소시험도시 13억원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구축 7억원 등을 반영했다.

여기에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전주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48억원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 4억원 △일자리창출사업 14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8억원 등의 예산이 더해졌다.

주요 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

139억원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116억원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60억원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20억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10억원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 43억원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조성 33억원 △남부권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27억원 △월드컵경기장 조명교체 20억원 등이다.

동시에 광역교통망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린대로 확장 편입토지 매입 60억원 △정여립로 확장 공사 45억원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13억원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44억원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

도로(용진~우아)건설 20억원 △에코 시티 공영주차장 조성 164억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주저류시설 설치(학소지구) 55억원 △재해 위험지역 정비(월평·공덕·미산) 38억원 등의 예산도 책정했다. 또,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전거 등 구매지원 338억원 △수소자동차·시내버스 구매 및 도입 지원 429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7억원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2024년도 전주시 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전주시의회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욱기 기자



중국 이우에서 열린 '제9회 세계지방정부연합-아시아 태평양지구 총회'에서 전주시가 대만 타이페이, 중국 항저우, 대한민국 부산시 등과 함께 집행도시로 선출됐다.

국제무대에서 리더십 발휘 기대

우범기 전주시장,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구 집행위원 선출

우범기 전주시장이 세계 최대 지방정부간 국제기구인 세계지방정부연합-아시아 태평양지구(이하 UCLG-ASPAC)를 이끌어갈 집행위원으로 선출돼 글로벌리더십을 발휘하게 됐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3일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균형 잡힌 경제 발전 촉진'을 주제로 중국 이우에서 열린 '제9회 UCLG-ASPAC 총회'에서 전주시가 대만 타이페이, 중국 항저우, 대한민국 부산시 등과 함께 집행도시로 선출됐다.

전 세계 140개 국가의 24만 지방자치단체와 175개의 지자체 협의체가 가입된 UCLG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민서비스 질적향상, 주거환경 향상 도모, 지역사회 경제발전 지원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집행부 위원이 된 전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약 2년간 UCLG-ASPAC 활동과 정관 개정 등 실질적인 승인 및 발언권을 갖게 돼 국제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총회를 맞아 중국 이우에 실무단을 파견하고 총회가 열리는 동안 다양한 세션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 홍보부스를 통해 전주의 다양한 글로벌 관광 자원과 차별화된 도시의 정체성 등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자매(우호)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제기구와 글로벌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행사 개최 및 유치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지자체로 드물게 도시 외교와 국제교류의 지평을 넓혀왔다.

우범기 시장은 이날 "전주시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구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전주가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글로벌 이슈와 이니셔티브를 선도하는 도시가 됐다는 의미이다. 다른 세계적인 도시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 진정한 글로벌 미래도시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제40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서 촉구 건의안 채택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15일 시의회는 제40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성길 의원(행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지방소멸 위기 등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전북특별법이 통과돼 전북은 전국에서 네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 등 28개의 선입적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지역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특례를 포함



1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도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의회는 이런 문제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

으로 예산을 비롯해 조직 등 독자적 인 전북 구현은 헛구호에 그치게 된다.

시의회는 이런 문제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

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 국회 등에 해당 건의안을 보낼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수능 수험생 교통 지원

전주시설공단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지콜'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수험생은 물론 수험생을 자녀로 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16일 오전 6시부터 시험 시작 전까지 전주 시내 고사

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공단의 방침이다.

공단은 이지콜 이용객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을 받아 배차를 완료했다.

특히 수험생들에게 시험 당일 컨디션이 매우 중요한 만큼 공단은 당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이지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로 특별 친절 교육을 진행했다.

공단은 수능 시험일뿐 아니라 '장애인의 날'과 '가정의 날', '노인의 날'에도 이지콜을 무료로 운행하는 등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용한 교통약자지원부장은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고사장에 도착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한파 대비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간담회 가져

전주시가 겨울철 한파로부터 노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인맞춤돌봄기관들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지난 13일 대우빌딩 7층 회의실에서 한파 대비 보호 체계 수립을 위한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올겨울 노인맞춤돌봄 13개소 수험기관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400여 명을 투입해 5800여명의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취약계층 노인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시는 △수행인력의 한파특보 및 대설특보시 행동 요령 △취약계층 안부 확인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한파쉼터 이용 안내 등의 한파 대비 교육 등 대책을 추진해 보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는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 470여 곳을 한파 쉼터로 지정, 내년 3월까지 '취약 노인 한파 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